‘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하라!!!

헌법 수호 책무 저버린 특정 종교 특혜 입법을 규탄하며, ‘2027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공적 지원 철회를 촉구한다

2027 세계청년대회는 일반적인 세계문화교류 행사가 아닌, 행사 명칭에 종교가 생략된 가톨릭교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가톨릭 신앙 행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직사회의 엄격한 종교적 중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가 주관하는 교리·선교 행사인 ‘2027 세계청년대회(WYD)’를 앞두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헌법이 정한 평등권과 정교분리 원칙을 참담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은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경쟁적으로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제문화행사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 통과시키더니, 정부에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마저 당 차원의 지원단을 출범시키는 초법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편향적 특혜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폭주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특혜성 조례 제정과 업무협약이 이렇게 남발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회의 입법 폭거

서울시의회는 종교 간 형평성 논란 속에서도 서울시와 교육청 부담만 무려 972억 원에 달하는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2건을 기습 가결**했습니다.

– 기초 자치구의 동조와 공적 자원 동원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서울대교구와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당고개·새남터 등 천주교 순례길 정비와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특히 구로구의회는 구체적 역할과 예산조차 미정인 상태에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입법예고·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들에는 예산 범위 내 공간 제공,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관련 시설 개보수 지원 등 특정 종교를 위한 독소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서막

이제 이 논란은 서울을 넘어 교구대회가 개최되는 충남 등 전국 지방정부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며 다종교 사회의 화합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 국가가 특정 종교의 ‘선교 목적 행사’에 재정과 행정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세계청년대회는 단순한 국제 문화교류 행사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황이 주재하고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여 교리 학습과 신앙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특정 종교의 선교 집회**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일반법과 기존 국제행사 지원 제도를 외면하고, 오직 이 대회만을 겨냥한 특별법과 조례를 신설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고 공교육 자원(학교 시설 숙소 동원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종교적 중립 의무(정교분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공공재정이 특정 종교의 인프라 구축과 포교 활동에 사유화되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종교에 끄달리는 악습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 공직사회에 종교적 편향을 강요하고 종교 간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지원단 출범과 자치구의 강제적인 공적 인력 동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특정 종교 행사의 수발을 들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공직사회 내부의 종교적 갈등을 유발하고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종교 편향 행위입니다.** 각종 선거 계산에 매몰되어 여야 없이 종교 편향에 동조하는 국회와 지자체장들의 행태는 다종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종교 간 평화로운 공존의 틀을 깨뜨리고 사회적 분열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망각한 채 특정 종교 우대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자치단체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와 국회, 각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및 각 자치단체의 편향적 특혜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전면 폐기해야할 것입니다. 만일 이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세금 몰아주기와 공적 자원 유용을 강행한다면, 헌법 수호와 종교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불기 2570(2026)년 9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별위원회 위원장 翠山 普化